

특정감사

감 사 보 고 서

-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Ⅰ) -

2019. 4.

감 사 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고발사항.....	2
(1) 하도급 업체 선정 등에 부당 개입 [징계·통보(인사자료)].....	3
(2) 구름다리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및 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 [징계주의통보통보(사정완료)].....	19
(3) ㄱ 및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고발).....	30
(4) 직무대리 부당 지정을 통한 승진임용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32
(5) 금품 수수 [통보 (비위)].....	38
(6) 서울대학교 교수의 겸직에 따른 보고의무 등 미이행 (주의·통보).....	42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였는데도 계약·공사·인사 등을 둘러싼 비리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자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인사 비리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서울특별시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는 감사인력 11명을 투입하여 2018. 10. 10.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15일간 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3명이 2018. 10. 31.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10일간 추가 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질문·답변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감사원의 내부 검토를 거쳐 2019. 4. 18.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고발사항

감 사 원

징계요구 및 통보(인사자료)

제 목 하도급 업체 선정 등에 부당 개입

소 관 기 관 서울특별시

조 치 기 관 ① 서울특별시 ② 서울특별시 ▽구

내 용

1. 업무 개요

서울특별시(○본부 □부)는 2014. 12. 30.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A, 이하 “○○개발”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대표이사 B, 이하 “□□”라 한다)¹⁾와 “서울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증축공사(건축, 토목, 조경)”(이하 “어린이병원 증축공사”라 한다) 계약(계약금액 109억 원)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개발 및 □□는 2015. 4. 30.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이하 “△△”라 한다)와 하도급계약²⁾(계약금액 38억 원)을 체결하였고, 서울특별시는 2015. 5. 18. ○○개발 및 □□와 △△ 간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승인 통보하였다.

한편 ○○개발은 2015. 1. 15. 무직이었던 D를 어린이병원 증축공사의 현장대

1) ○○개발은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고 □□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업체인데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입찰공고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의 경우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 ○○개발은 지역제한기준을 맞추기 위해 □□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추진하였으며 도급비율은 ○○개발과 □□가 각각 51%와 49%로 주관사는 ○○개발이며, 계약기간은 2014. 12. 30.~ 2017. 2. 19.임

2) 공사기간은 2015. 5. 1.~2017. 2. 19.이며 하도급률은 82.17%임

리인으로 선임하기 위해 직원(○○개발 □부 부장)으로 채용한 후 2015. 1. 20. D를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는 현장대리인계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였고, D는 2015. 1. 15.부터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준공(2017. 7. 24.) 이후인 2017. 8. 15.까지 계 32개월간 ○○개발의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2. 업무 담당자들의 비위 행위

서울특별시 △담당관실 E은 2013. 3. 15.부터 2016. 3. 15.까지, 서울특별시 ▽구 □과 과장 F은 2014. 7. 25.부터 2015. 1. 11.까지 각각 서울특별시 ○본부 □부 ▹과 위 직 또는 직위에서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공사관리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발주 및 기성금 지급 등 관련 업무를 주관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 및 제7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 일체의 부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10조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에서도 공무원은 직위 또는 소속기관의 명칭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F과 E은 다음과 같이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계약업체인 ○○개발 등으로 하여금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부당하게 관여하고 특정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라고 요구하였으며, 하도급 업체가 체불한 공사 대금을 대납하라고 부당하게 요구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F의 경우

1) 하도급 업체 선정에 부당 개입

F은 서울특별시 ○본부 □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2월경(2014. 12. 10.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계약업체 낙찰 공고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G³⁾(△△의 회장으로서 실질적 대표)이 서울특별시 ○본부 □부 사무실로 찾아와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도급사가 결정된 것을 알고 있으니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담당자를 소개해달라”라고 하자, G에게 E을 소개했다. 이때 F과 E은 G으로부터 어린이병원 증축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F은 2015년 1월 초경(날짜 모름)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구 감리단장)였던 H⁴⁾에게 전화하여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가 행정 처리도 복잡하고 공사 자체도 어려우니 서울시 공사 경험이 많은 업체인 △△가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토공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도급사인 ○○개발에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공동도급사였던 □□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가 공사할

3) F은 G에 대해 2014년 초여름경 서울특별시 <구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당시 <구청장 I이 “토목업자 인데 잘 부탁하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좀 도와주라”며 소개해서 알게 된 사이이고, G이 가끔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며 인사하러 사무실에 왔었고, 함께 골프를 친 적도 있다고 진술함. E의 진술에 따르면, F과 G은 같이 골프를 치러 다니는 사이라고 G과 서울특별시 다른 직원들로부터 들었다고 함

4) 서울특별시는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J)와 2014. 12. 30.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H이 선정되었음(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따라 공사현장점검, 각종 보고서 작성, 기성검사, 준공검사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업무를 대행함)

수 있도록 하겠다⁵⁾고 하는 등 H에게 △△가 어린이병원 증축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부탁하였다. F의 부탁을 받은 H은 2015년 3월 경(날짜 모름) ○○개발에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어린이 병원 증축 공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에 하도급을 맡기라고 추천⁶⁾하였다.

이후 ○○개발은 2015년 3월경(날짜 모름) 하도급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당초 서울특별시에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도급을 주려던 ▽▽개발(○○개발의 자회사)⁷⁾에는 하도급 포기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시키지 아니하는 대신 △△를 참석시켰으며, 같은 해 4. 30. △△와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부하직원을 통해 계약업체에 인척 채용을 요구

F은 어린이병원 증축공사를 낙찰받은 ○○개발 및 □□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4년 12월 말경(날짜 모름) ○○개발이 당시 무직 상태⁸⁾였던 자신의 인척(동서)인 D를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기 위해 부하직원인 E에게 “내가 사람을 한 명 알려줄테니 그 사람으로 현장대리인을 선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척인 D의 이름과 경력사항, 전화번호 등이 적힌 이력서를

5) 이번 감사 시 F이 □□ 측의 누구에게 연락하였는지 답변하지 않았으나, 당시 □□의 공사 담당 차장 K의 진술에 따르면, 2015년 3월경 어린이병원 증축공사의 하도급계약 개찰 전후로 당시 직속 상관인 □□ 상무로부터 “서울시 ○본부에서 근무하는 서울시 공무원이 □□의 모회사인 <<개발 임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시 어린이병원 증축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를 추천하는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함

6) F의 동서인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현장대리인 D도 H으로부터 2015년 2월경 수차례 “△△는 서울시에서 추천한 업체이므로 하도급을 줘야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음

7) ○○개발은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입찰 시 ▽▽개발에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년 4월경 △△로 하도급 업체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변경계획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였고, ▽▽개발(○○개발의 자회사)도 2015. 4. 10.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음

8) D는 1998년 강원도 강릉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을 한 뒤에는 현장대리인 경험이 없었고, 2011년부터는 무직 상태였음

주었다.

이에 E은 곧바로 ○○개발 부장 L에게 전화하여 D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D에게 전화해서 D가 현장대리인을 하겠다고 하면 현장대리인으로 참여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E의 지시를 받은 L⁹⁾은 2015년 1월경(날짜 모름) D에게 전화하여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D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개발은 2015. 1. 15. D를 ○○개발 □부 부장으로 채용한 후 2015. 1. 20. 서울특별시(▷과)에 D를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였고, D는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준공(2017. 7. 25.) 후인 2017. 8. 15.까지 계 32개월간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근무¹⁰⁾하였다.

나. E의 경우

1) 계약업체의 하도급 업체 선정에 개입 및 특정한 채용 요구

E은 2014. 12. 10. 어린이병원 증축공사에 ○○개발 및 □□가 낙찰되자, ○○개발 계약담당 부장 L에게 전화하여 계약 체결 전에 발주처와 계약업체 간 상견례를 하자며 같은 해 12. 24. 서울특별시 ○본부 ▷과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다. ○○개발 이사 M과 부장 L은 ○○개발이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등으로 인해 2014. 12. 24. 당초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하였으나 이보다 늦은 오후 6시경에 ▷과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던 E은 상견례를 위해 찾아 온 M

9) L은 어린이병원 증축공사를 시작도 안했는데 발주처의 요구를 바로 거절하면 공사를 시작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

10) D는 ○○개발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32개월간 매월 300여만 원, 계 98,295,160원의 급여를 받았음

과 L에게 “○○개발은 지방에 있는 작은 업체인데 어린이병원 증축공사는 정말 어려운 공사이니 토공이나 철근콘크리트공사는 내가 서울시 공사 잘하는 하도급 업체를 하나 알려줄테니 그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된다”면서 △△를 알려주었고 이후에도 L에게 하도급 업체로 △△를 추천하는 연락을 몇 차례 더 하였다.¹¹⁾

이에 ○○개발 부장 L은 2015년 2월경(날짜 모름) 하도급계약 입찰공고를 준비하면서 E으로부터 △△의 회장 G의 연락처를 받아 G에게 전화하여 “○○개발이 하도급계약 입찰을 하려고 하니 △△에서도 견적서를 제출하라”라고 하였고, 같은 해 3월경(날짜 모름) ○○개발이 실시한 현장설명회에 △△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는 “2항 가 1)”의 내용과 같이 2015년 3월경(날짜 모름) 어린이병원 증축공사(어린이병원 증축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낙찰받았고, 같은 해 4. 30. ○○개발 및 □□와 △△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은 같은 해 5. 18. ○○개발 및 □□와 △△ 간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승인 통보하였다.

한편, E은 2014. 12. 24. ○○개발 이사 M 등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어린이병원 증축공사는 병원 공사라서 공사 자체에 난이도가 있어서 현장 민원도 많아 나중엔 안전 별점을 맞을 수도 있으니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유능하고 일 잘하는 메가톤급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12월 말경(날짜 모름) 자신의 상관인 F으로부터 D의 연락처와 이력서를 받아 이를 L에게 전달하면서 “D에게 전화해서 D가 현장대리인을 하겠다고 하면 현장대리인으로 참여하도록 하라”

11) 현장대리인 D는 2015. 1. 15.과 같은 해 2월경(날짜 모름) 공사현장에서 △△ G 등이 돌아다니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진술하였고 ○○개발 L과 감리단장 H으로부터 G은 △△의 회장인데 △△는 서울특별시에서 하도급을 주라고 지시한 업체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함

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개발은 “2항 가 2)”의 내용과 같이 2015. 1. 20. 서울특별시에 D를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였다.

2) 하도급 업체가 체불한 공사 대금의 대납을 요구

서울특별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및 제6항에 따라 2015년 5월경(날짜 모름) ○○개발, □□, △△와 함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여 하도급대금 중 기성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가 계약업체인 ○○개발과 □□를 거치지 않고 △△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는 ○○개발과 □□로부터 선금금 명목으로 2015. 6. 1. 650,000,000원, 같은 해 9. 9. 200,000,000원 계 85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5. 5. 1.부터 2015. 8. 31.까지의 공사분에 대해 ○○개발을 통해 서울특별시에 같은 해 8. 13. 및 9. 15. 기성금 지급을 청구¹²⁾하였다. 이에 E은 각 청구받은 날 ◇부(♡과)로 하여금 △△에 기성금 106,903,200원과 126,316,500원을 지급해주도록 요청하였고, ◇부는 같은 해 9. 21. 계 233,219,700원을 지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에 따르면 기성대가를 지급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12) △△가 ○○개발에 기성금 내역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개발은 기성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관리관인 E의 입회 아래 감리단의 기성검사를 거쳐 서울특별시에 기성금을 청구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받고 그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2015. 5. 6. 위 규정을 근거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개선을 통한 건설공사 하도급 권익구제 강화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 184호)을 마련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최근 1년간 체불신고가 3회 이상 접수된 상습 체불업체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가 자재·장비업자들에게 공사 대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검토하여야 했고, 기성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알려 기성금이 공사에 참여한 업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는 2015년 9월경 두차례에 걸쳐 선금금 계 850,000,000원¹³⁾을 수령하고도 어린이병원 증축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 대금으로 사용한다는 등의 사유로 [별표] “(주)△△가 자재·장비비를 미지급한 업체 명세”와 같이 ◇◇ 등 20개 공사 참여 업체들에 2015년 5월부터 9월 사이 어린이병원 증축공사에 사용한 공사 장비와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13) △△와의 하도급계약 총액은 3,801,000,000원임

그런데 당시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담당이었던 E은 2015년 6월경(날짜 모름)부터 일부 공사 업체 관련자 등으로부터 △△가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전화를 직접 받거나 같은 해 8월경(날짜 모름) 현장대리인 D와 책임건설사업 기술자 H으로부터 현장 인부들이 △△로부터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고 댄트럭으로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현장을 막아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는 등의 보고를 받아 △△가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E은 △△가 2015. 8. 13.과 같은 해 9. 15. 청구한 기성금에 대해 기성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검토하지 않았고 기성금이 자재·장비업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E은 2015년 9월경(날짜 모름) △△ 회장 G에게 전화하여 7~10일 안에 빨리 민원을 해결하라고 구두로만 요청하였다.

더욱이 E은 위와 같은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2015. 9. 3. ○○개발의 L에게 전화하여 “△△가 공사비를 체불한 인부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내고 있으니 ○○개발이 인부들에게 체불금을 빨리 지급하라”라고 하였고, 같은 해 9. 7. L에게 재차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자금 지금 급합니다”라며 △△가 지급하지 않은 공사 대금을 ○○개발에서 대납하도록 부당하게 계속 요구하는 등 [표]와 같이 ○○개발과 □□의 대금 대납 거부 의사¹⁴⁾에도 “민원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면 ○○개발에서 지체상금

14) 당시 E의 대납 지시에 대해 ○○개발과 □□는 E이 대납하라고 지시하는 금액은 이미 ○○개발과 □□가 △△에 기성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니 공사비를 대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기성금의 경우 공사가 진척되는 정도에 따라 △△가 각 공종마다 장비사용 내역, 자재 투입비용 등을 산출하여 계약업체인 ○○개발에 청구하면 이를 감리단에서 기성검사한 후 발주처인 서울특별시에 청구하므로, 9월 기성금 청구금액에는 착공부터 9월까지의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을 내야하고 별점을 먹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지체상금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좀 발주처에서 배려해 줄테니 본인을 믿고 일단 얼른 입금을 하라”거나 “형태경국장님께 찍히지 맙시다”라는 등 공사 대금을 대납하도록 계속해서 요구하였다.

[표] E의 공사 대금 대납 관련 요구 내역

구분	일자	대상	연락 수단	요구내용	경위
1	2015. 9. 3.	○○개발 L	휴대 전화	“△△가 공사비를 체불한 인부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내고 있으니 ○○개발이 인부들에게 체불금을 빨리 지급하라”	공사참여자들이 2015년 7월경부터 △△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서울특별시 ○본부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하자 E이 계약업체인 ○○개발 및 □□직원에게 공사대금 대납을 종용함
2	2015년 9월경	□□ K	휴대 전화	“△△가 체불하여 발생한 민원을 빨리 처리하라”	
3	2015. 9. 7.	○○개발 L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자금 지금 급합니다”, “결과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 일찍 부탁드립니다”	2015. 9. 3. L이 E에게 공사비 대납은 ○○개발 내부적으로 화의가 필요하고 공동계약업체인 □□와 협의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결정이 되면 알려주겠다고 하자, E이 며칠 후인 9. 7.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며 자금 집행을 요구함
4	2015년 9월경	○○개발 L	휴대 전화	“민원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면 ○○개발에서 지체 상금을 내야하고 벌점을 먹을 것이다, 지체상금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좀 발주처에서 배려해 줄테니 본인을 믿고 일단 얼른 입금을 하라”	○○개발이 E의 공사대금 대납 지시를 중복 지급이라고 주장하며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E이 여러 차례 전화하여 대납하도록 회유함
5	2015. 10. 7.	□□ K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모든 책임은 발주자인 본인이 질테니 세금계산서 받은 것 빨리 지급해주세요”	□□는 △△에 공사 대금을 이미 선금과 기성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대납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E은 2015년 10월경(날짜 모름) 서울특별시 ▽구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F을 찾아가 □□가 공사 대금을 대납하도록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E이 다시 한번 K에게 공사대금 대납을 촉구함
6	2015. 10. 13. 15)	○○개발 L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빠르게 정비해요. 현장 계속 멈추면 손해는 귀사니까? 국장님이 나보고 매일 보고하라 하는데 사태 파악을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N국장님께 찍히지 맙시다”	2015. 10. 5.과 같은 달 7. ○○개발과 □□가 공사 대금을 대납한 이후에도 △△의 공사비 체불과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자 E이 2015. 10. 11. L에게 직불을 하라고 전화를 했는데 ○○개발이 지시대로 조치를 하지 않자, E은 서울특별시 담당 국장을 언급하며 ○○개발의 대납을 요구함

자료: ○○개발 L 등의 진술 및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개발과 □□는 △△가 선금금과 기성금 계 1,083,219,700원을 이미 지급받았는데도 [별표] “(주)△△가 자재·장비비를 미지급한 업체 명세”와 같이 2015. 10. 5.와 같은 해 10. 7. ◇◇ 등 20개 업체(○○개발 4개 업체, □□ 16개 업체)

15) E의 요구에 의해 ○○개발 등이 2015. 10. 5. 및 10. 7. 대납을 하게됨. 그러나 그 뒤에도 △△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E은 ○○개발에 대납 강요를 또 하였음(○○개발은 이에 대해 추가 대납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에 계 339,146,334원¹⁶⁾을 재차 지급하였다.

그 후 ○○개발과 □□는 2016. 6. 8. △△의 자진 포기로 건설공사면허가 말소되자 같은 해 9. 29. △△와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개발과 □□는 하도급 없이 직접 어린이병원 증축공사의 토공과 구조물 공사를 하였고, 결국 E의 요구대로 △△ 대신 지급하였던 공사 대금 계 339,146,334원을 △△로부터 받지 못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관계기관 의견 서울특별시는 감사결과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는 등 하도급 부조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련자 주장 및 판단

① 이 건 관련자 F은 “2항 가 1)”과 관련하여 ○○개발과 □□에 △△에 하도급을 주도록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2014. 12. 12. 어린이병원 증축공사를 발주할 당시 ○본부 ▷과에서 G과 △△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람은 F뿐이었으며 F은 2014년 여름경 당시 ◁구청장이었던 I으로부터 “토목업자인데 도와줄일이 있으면 도와주라”면서 G을 소개받았고 G과 함께 골프모임에 참석하는 등

16) ○○개발과 □□가 중복 지급한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으나 △△가 ○○개발에 제출한 기성내역서에 따르면 △△는 “사토운반”, “바닥면고르기(발파)” 등 기성 공종내역으로 기성금을 수령한 것인데 △△는 사토운반, 발파업체에 2015년 5월 이후 대금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개발과 □□가 대납한 것이므로 대납금액과 당초 지급했던 선금, 기성금이 상당부분 중복된 것으로 보임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 어린이병원 하도급 공사를 낙찰받고 싶다는 G에게 어린이병원 증축공사의 공사관리관인 E를 직접 소개해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감리단장 H에게는 직접 △△가 하도급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F은 △△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F은 “2항 가 2)”와 관련하여 현장대리인으로 자신의 동서인 D를 선임하도록 요구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

② E은 “2항 나 1)”과 관련하여 ○○개발에 F의 인척인 D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라고 요구한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개발과 □□로 하여금 △△에 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한 데 대해서는 F이 2014. 12. 29. ○○개발 M 이사와 L 부장이 공사 관련 서류 보완 때문에 ○본부에 방문한 날 F이 ○○개발에 △△를 추천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를 추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개발과 □□의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담당이었던 직원 모두가 E의 소개로 △△와 회장 G을 알게 되었고 E의 요구대로 △△에 하도급 공사를 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개발은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업체로 어린이병원 증축공사가 서울특별시와 하는 첫 번째 공사이고 현장대리인 선임 요구건에서 보듯이 E이 ○○개발에 계속 연락을 해온 점, F은 2015년 1월경(날짜 모름) 감리단장 H에게 □□는 본인이 알아서 할테니 ○○개발에 △△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 점, ○○개발은 감리단장 H이 F의 부탁을 받고 2015년

3월경(날짜 모름) △△를 하도급 업체로 추천받기 전부터 △△가 서울특별시 추천 업체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E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E은 “2항 나 2)”와 관련하여 △△가 지급하지 않은 공사 대금을 ○○개발과 □□가 대납하도록 요구한 것이 부당한 지시였다는 것을 당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체불 민원을 해결하고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개발 및 □□는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었고, 발주처의 공사관리관인 E이 계약 상대방인 두 업체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대금을 납부하도록 한 점, 더욱이 △△는 E이 두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한 업체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E의 요구는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징계요구 양정 하도급 업체가 부담할 공사 대금을 계약업체가 대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E의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에 위배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공사관리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업체의 대납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대납을 강요하여 결국 계약업체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행위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위 행동강령 등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정직에 해

당하는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외에도 징계사유의 시효가 지난 사항이지만 위 계약업체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해야 하는데도 E은 38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의 하도급 계약을 특정업체에 주도록 하거나 자신의 상사와 친분관계가 있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그 밖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도 있으므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하도급 업체가 부담할 공사 대금을 대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E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 따라 징계처분(정직)하시기 바랍니다.(징계)

계약업체로 하여금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하고, 자신의 인척을 현장대리인으로 채용하도록 요구한 □과장 F의 행위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비위내용을 통보하오니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통보(인사자료)]

[별표]

(주) △△가 자재 · 장비비를 미지급한 업체 명세

(단위: 원)

연번	업체명	거래내용	발생월	금액	입금업체	입금날짜
1	◇◇	토사운반	6, 7, 8월	142,634,800	○○개발(주)	2015. 10. 5.
2	(주)♡♡	발파	7월	4,400,000	○○개발(주)	"
3	(주)♠♠	컴프임대	5월	825,000	○○개발(주)	"
4	♣♣(주)	목재 (토류판)	5, 7, 8월	56,082,851	○○개발(주)	"
5	☆☆건설기계	천공	5월	27,500,000	□□(주)	2015. 10. 7.
6	●●종합중기	06W	6, 7월	11,456,500	□□(주)	"
7	■ ■	10LC	6, 7월	14,822,500	□□(주)	"
8	▲▲ 지게차	지게차	6, 7월	693,000	□□(주)	"
9	▶▶ 중기	06W외부	6월	1,980,000	□□(주)	"
10	▼▼ 중기	02Lc	7월	990,000	□□(주)	"
11	◀◀	축중기	5, 6, 7월	1,870,000	□□(주)	"
12	◀◀	축중기	6, 7월	22,720,925	□□(주)	"
13	◆◆주유소	E/A	6, 7월	36,416,152	□□(주)	"
14	♠♠상사	유류비	7월	2,904,330	□□(주)	"
15	♣♣ 가스 상사	잡자재	6, 7월	754,050	□□(주)	"
16	♥♥시스템	산소외	6, 7월	935,000	□□(주)	"
17	★★철강	철판 등	6월	4,153,226	□□(주)	"
18	⊙⊙ 중기	발전기	7월	1,210,000	□□(주)	"
19	▣▣	발파 계측	7월	6,050,000	□□(주)	"
20	(주)◆◆엔지니어링	대좌	7월	748,000	□□(주)	"
계				339,146,334	-	

주: 굵게 표시한 것은 E이 K에게 업체명을 알려주며 입금하라고 지시한 업체임
 자료: ○○개발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징계·주의요구 및 통보·통보(시정완료)

제 목 구름다리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및 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

소 관 기 관 구례군

조 치 기 관 구례군

내 용

1. 사건 개요

구례군은 2013. 1. 14.부터 “구례 오산 선바위 구름다리 설치사업”(이하 “위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2013. 3. 25.부터 같은 해 4. 23.까지 주식회사 △△기술(대표이사 O¹⁷⁾)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한 후 같은 해 5. 30. 주식회사 ◎◎(대표이사 P)과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표 1]과 같이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구례 오산 선바위 구름다리 설치사업 관련 주요 계약

(단위: 만 원)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방법
2013. 3. 20.	구례 오산 선바위 구름다리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주식회사 △△기술	1,860	수의계약
2013. 5. 30.	구례 오산 선바위 구름다리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주식회사 ◎◎	7,703	제한경쟁계약(지역)
2014. 6. 24.	구례 오산 선바위 구름다리 설치사업	●●건설주식회사	56,377	제한경쟁계약(지역)
2014. 7. 14.	구례 오산 선바위 구름다리 설치사업 관급자재 케이블시스템 구입	●●주식회사	72,271	수의계약

자료: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17) 2013. 6. 7. 주식회사 △△기술의 대표이사는 Q으로 변경

구례군은 2014년 4월 말경(날짜 모름) 위 사업의 구름다리(현수보도교, 길이 56m)를 구성하는 핵심 자재인 케이블시스템¹⁸⁾ 등 4건¹⁹⁾에 대하여 관급자재로 분리 발주하기로 한 후 구름다리 기초 시공 등의 도급공사²⁰⁾는 2014. 6. 24.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R)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케이블시스템은 2014. 7. 14. ○○주식회사(대표이사 S, 이하 “○○”라 한다)와 구매계약²¹⁾(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구례군은 2014. 6. 25. 도급공사에 착수한 이후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헬기를 이용한 공사용 자재 운반 일정이 지연되는 등²²⁾의 문제로 위 사업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2014. 12. 19. 위 도급공사를 정지하였다.

이후 구례군은 자재운반 협의 지연 및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2017. 2. 27. 주식회사 ○○건설²³⁾(대표이사 R)과 계약을 해지하는 등 위 사업을 중단하였다.

한편 ○○와 2014. 7. 14. 체결한 케이블시스템 제작 및 설치계약에 대해서는 2015. 5. 27. 기성금 344,502,900원을 지급하는 등 계약금액 722,715,900원 중 계 630,502,900원²⁴⁾을 지급하였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8)케이블, 정착구, 재인장장치 등으로 구성

19)철근, 강재, 난간, 바닥재

20)구름다리의 기초와 주탑 등을 시공

21)케이블시스템을 제작하여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조건

22)그 외 구름다리가 설치되는 주탑의 시공방법을 당초 앵커고정식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으나 현장상황상 시공이 어려워 기초 콘크리트 고정식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되어 공사일정이 지연됨

23)2015. 1. 8. ○○건설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건설로 법인명 변경

24)선금은 2014. 7. 18.에 286,000,000원 지급

가. 실시설계 용역 불법 하도급 묵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례군이 2013. 5. 30. 주식회사 ○○과 체결한 “구례 오산 선바위 구름다리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이하 “실시설계 용역”이라 한다)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계약대상자는 용역을 다른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은 2013. 5. 30. 실시설계 용역을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시설계를 수행할 능력이 없자²⁵⁾ 같은 해 6. 5. 주식회사 △△기술²⁶⁾과 ‘기술지원약정’을 체결(계약금액 47,551,000원)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일괄²⁷⁾ 하도급하였으며, 주식회사 △△기술²⁸⁾은 같은 날 ●●엔지니어링²⁹⁾(대표 T)에 실시설계 용역 전부를 다시 일괄하여 하도급(계약금액 43,456,000원)하였다.

당시 구례군 ♡과 팀장 U(현 ♡)는 2014년 1월경(날짜 모름) 주식회사 △△기

25) 2013. 5. 23. 구례군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자 주식회사 ○○은 용역입찰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만 확인하고 실제로 실시설계 용역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하지도 않은 채 2013. 5. 28. 입찰에 참가하였음

26) 주식회사 ○○은 2013년 6월 초경(날짜 모름) “구례 오산 선바위 구름다리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기술에 실시설계 용역 전체를 맡기고 싶다고 연락함

27) 주식회사 ○○의 책임기술자 V의 진술에 따르면 구름다리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전체를 일괄하여 주식회사 △△기술에 하도급을 주었고, 실시설계에 주식회사 ○○이 검토한 부분은 없다고 함

28) 2013년 6월 초경(날짜 모름)에 주식회사 △△기술의 대표 Q은 그전부터 알고 지내온 ●●엔지니어링 대표 T과 상의를 하여 주식회사 ○○으로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하도급받기로 함

29) ●●엔지니어링은 2011년 12월부터 주식회사 △△기술 내에 별도의 사무실에서 6명 정도가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기술의 구조물 설계 등을 하도급받아서 수행하였고, 대표 T은 당시 주식회사 △△기술의 명함을 가지고 활동하였으며, 주식회사 △△기술이 2013. 3. 25. ~ 4. 23. 실시한 “구례 오산 선바위 구름다리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도 ●●엔지니어링이 주식회사 △△기술로부터 일괄 하도급 받아 T이 용역 책임자로 용역을 수행함

술 상무로 행세³⁰⁾하던 ●●엔지니어링 대표 T으로부터 주식회사 ○○이 아니라 주식회사 △△기술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도급받아 수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들었고 이후에도 T과 실시설계 용역 업무를 협의하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의 하도급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 부서 업무담당자 W도 T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U는 설계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 등으로 주식회사 ○○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의 불법 하도급 사실을 ♡과장 X³¹⁾ 등에게 보고하지도 않는 등 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다.

또한 W은 2014. 6. 2. 전라남도에 “구례 오산 선바위 구름다리 설치사업 계약심사 의뢰”(♡과-8259) 공문을 기안하면서 “공사계약 심사요청서”의 설계자 항목에 T³²⁾을 책임기술자로, 소속은 주식회사 ○○으로 허위³³⁾ 기재하였고, U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공문에 대해 그대로 검토 서명을 한 후 산림경영소득담당 Y의 결재를 받아 전라남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였다.

나. 케이블시스템에 대한 특정업체·제품 부당 선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나-7)에 따르면 설계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30) T은 구례군의 W과 U에게 주식회사 △△기술 상무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주는 등 주식회사 △△기술 상무로 행세

31) 2015. 6. 30. 퇴직

32) U의 진술에 따르면 전라남도에 계약심사를 받을 때 설계자가 설계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대비해 설계자에는 V이 아닌 T으로 기재하였다고 함

33) W은 T의 소속을 구례군과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아닌 주식회사 △△기술로 기재하면 전라남도로부터 계약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소속을 주식회사 ○○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

한편, 주식회사 △△기술로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하도급받은 ○○엔지니어링의 대표 T은 2009년경부터 강구조물, 케이블시스템 설계·시공 사업을 하고 있는 ○○와 입찰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인연을 맺어오다가³⁴⁾ 2013년 하반기경(정확한 월 모름) ○○로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대신해주는 조건으로 ○○의 케이블시스템이 납품될 수 있게 설계서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T은 2014년 2월 중순경(날짜 모름)에는 구례군 ♡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의 케이블시스템이 가장 우수하다고 U에게 설명하였고, 같은 해 2월 말경(날짜 모름)에는 ○○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로서 다른 경쟁업체 제품에 비해 ○○의 케이블시스템이 유리³⁵⁾하게 작성된 “케이블비교”³⁶⁾ 자료를 U 등에게 보여주면서 ○○의 케이블시스템을 설계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천하였다.

그런데도 U는 “3항”의 내용과 같이 2014. 1. 31. 설 명절 며칠 전에 T으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받거나 현금 등을 받으면서 각 케이블시스템의 특허 보유 여부나 경제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특정 업체 제품을 설계서에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도 검토하지 않은 채 단지 T을 신뢰하였다면서 2014년 2월 말경(날짜 모름) T이 추천해준 대로 ○○의 케이블시스템을 구름다리 설치공사 설계서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고는 군수 AA에게 ○○의 케이블시스템을

34) T과 ○○ 이사 Z의 진술에 따르면 T은 전라남도 내의 구조물 관련 입찰정보가 있으면 다른 업체보다 ○○에 먼저 알려주었고, ○○는 명절에 T에게 선물을 보내거나 종종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등 긴밀한 인연을 맺어왔다고 함

35) ○○ 외의 다른 업체 케이블시스템의 특허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경제성 또한 명확한 근거 없이 ○○의 케이블시스템이 가장 우수하다고 기재되어 있음. 그리고 당시 ○○의 Z과 AB은 “케이블비교” 자료는 ○○에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로 사용되면 다른 업체에서 공정성 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진술

36) “케이블비교” 자료는 케이블시스템의 종류가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각 케이블시스템별로 장단점, 지적재산 여부, 경제성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의 케이블시스템이 제1안으로 제시되어 있음

위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후 U는 철저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T으로부터 자문위원을 추천 받아 2014. 3. 5. 주식회사 ■■■ 이사 AC 등 3명³⁷⁾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재·공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 위원회에서 T은 자문위원들에게 구름다리 설치공사에 ○○의 케이블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자문위원회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끝났다.

이에 따라 구례군은 2014. 5. 16. ○○의 케이블시스템이 반영³⁸⁾된 설계서를 주식회사 ◎◎³⁹⁾으로부터 그대로 납품받고서 설계서를 근거로 같은 해 7. 14. ○○와 관급자재로 케이블시스템을 구입하는 수의계약(계약금액: 722,715,900원)을 체결하였다.

다. 계약해지에 따른 선금 정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2절 5.(나, 라)에 따르면 선금을 지급한 이후 기성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기성대가에서 선금 정산액[선금액×(기성·기납 부분의 대가 상당액/계약금액)] 이상을 차감한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례군은 2014. 7. 18. ○○에 선금 28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5. 21. ○○가 케이블시스템 제작을 완료했다면서 기성액 570,113,720원에서 선금

37) 주식회사 ■■■ 이사 AC, 주식회사 ■■■ 부사장 AE, ■■■건설 주식회사 상무 AD

38) 설계서에 CABLE SET는 특허 제10-○○○○○○○○호를 사용하고, 재인장장치는 신기술 제○○○호를 사용한다고 명시하는 등 ○○의 케이블시스템을 설계서에 반영

39) 실시 설계는 ○○엔지니어링 대표 T이 하였으나, 설계 계약업체가 주식회사 ◎◎이어서 ◎◎ 명의로 설계서가 납품됨

정산액 225,610,820원⁴⁰⁾을 차감한 344,502,900원을 기성대가로 청구하자 2015. 5. 27. 이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구례군은 ○○와 체결한 케이블시스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014. 7. 18.에 지급한 선금 286,000,000원에서 선금 정산액 225,610,820원을 제외한 미정산 잔액 60,389,180원을 반환 청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구례군 ☆과 계약담당자 AF은 2016. 12. 31. 계약이 종료⁴¹⁾되었는데도 선금 잔액 60,389,180원(286,000,000원-225,610,820원)을 감사원 감사 기간 중인 2018. 10. 12. 현재까지 환수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⁴²⁾

3. U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부당한 업무 처리

구례군 읍읍 U는 2010. 9. 7.부터 2017. 1. 8.까지 읍과에서 근무⁴³⁾하면서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U는 “2항 가”와 같이 2014년 1월경(날짜 모름)에 T이 구름다리 설치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을 총괄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후, T의 사무실 직원(이름 모름)이 U에게 자택 주소(구례군 ■■■아파트 거주)를 물어보자 알려주었고 이후 2014.

40) $[286,000,000\text{원} \times (570,113,720\text{원} / 722,715,900\text{원})] = 225,610,820\text{원}$

41) 구례군은 2016. 12. 31.까지 케이블시스템 구매계약 기간을 연장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2016. 12. 31. 계약이 종료되어 해지됨

42) 구례군은 2018. 11. 17. ○○로부터 60,389,180원 환수조치

43) 2010. 9. 7.부터 2014. 8. 19.까지는 ●팀장, 2014. 8. 20.부터 2017. 1. 8.까지는 산림휴양담당으로 근무

1. 31.(설 명절) 며칠 전(날짜 모름) T 명의로 배송된 15만 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자택에서 수수하였다.

그리고 U는 2014년 2월경(날짜 모름)에는 T과 구례군 ♀과 사무실에서 구름다리 설치사업에 사용할 케이블시스템 선정을 위한 회의를 한 후 T이 U에게 차 한 잔 마시자고 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함께 나가 구례군청 본관 3층 대회의실 창문 근처에서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현금 50만 원이 담긴 황색 행정 각대봉투를 건네주자, 이를 수수하였다.

그러면서 U는 위 “2항 나”와 같이 T의 추천대로 ○○의 케이블시스템을 설계서에 반영하기로 하고 2014년 2월 말경 군수 AA에게 T 등으로부터 건네 받은 “케이블비교” 자료의 내용을 보고하면서 ○○의 케이블시스템이 우수하여 위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이후 ○○의 케이블시스템이 반영된 설계서를 그대로 납품받고 이를 근거로 2014. 7. 14. ○○와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에도 U는 2014년 7월경(날짜 모름) 산림청 헬기를 이용한 자재운반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구름다리 설치사업 공사현장을 확인하면서 T이 U에게 “계장님 휴가 잘 다녀오십쇼”라고 하면서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흰 봉투를 바지에 넣자 이를 그대로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U는 [표 2]와 같이 T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70만 원과 39만 원 상당의 물품을 수수하였다.

[표 2] 구례 오산 선바위 구름다리 설치사업 관련 U의 금품수수 명세

연번	일시	금품내용	금품 수수 장소	수수액
1	2014. 1. 31.경	한우	U 자택	15만 원 상당
2	2014년 2월경	현금	구례군청 본관 3층 대회의실 근처	50만 원
3	2014년 7월경	현금	구름다리 설치사업 현장	30만 원
4	2014. 9. 9.경	한우	U 자택	10만 원 상당
5	2014년 10월경	현금	구례군청 본관 3층 자판기 앞	30만 원
6	2015. 2. 19.경	표고버섯	U 자택	7만 원 상당
7	2015년 2월경	현금	구름다리 설치사업 현장	30만 원
8	2015년 7월경	현금	구름다리 설치사업 현장	30만 원
9	2015. 9. 28.경	표고버섯	U 자택	7만 원 상당
계				209만 원 상당

자료: U의 진술 내용을 기초로 재구성

한편 징계시효가 완성된 사항이지만, “2항 가”와 관련하여 U는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기술에 위 사업을 하도급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관계기관 의견 구례군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계약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따라 법령이 정한 대로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련자 주장 및 판단 U는 “3항”과 관련하여 T으로부터 170만 원의 현금과 39만 원 상당의 물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T에게 그 대가로 편의를 봐준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U와 T은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이 둘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었다는 점, U는 T이 케이블시스템 선정에 대한 설명을 위해 구례군 ♠과에 찾아왔을 때 금품을 수수하는 등 실시설계 용역 수행기간에 금품을 수수한 점, T이 추천한 ㉠㉠의 케이블시스템을 별다른 검토 없이 설계서에 반영한 점 등으로 보았을 때, U는 케이블시스템 선정 등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T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요구 양정 앞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직무관련자인 T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U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U는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고 T이 추천한 ㉠㉠의 케이블시스템을 별다른 검토 없이 그대로 위 사업의 설계서에 반영하는 등 T에게 금품수수의 대가로 업무상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구례군수는

- 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U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정직)하고(징계)
-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 따라 구례군의 승인 없이 “구례 오산 선바위 구름다리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일괄 하도급한

주식회사 ○○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하며(통보)

③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구례군이 2018. 11. 17. ○○ 주식회사로부터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 60,389,180원을 환수조치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며
[통보(시정완료)]

④ 앞으로 하도급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설계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규격을
지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고 발

제 목 ㄱ 및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피 고 발 인 성 명: U
주 소: 전라남도 구례군
근 무 처: 구례군 읍사무소
전근무처: 구례군 읍과
고 발 건 명 U: 뇌물수수(「형법」 제129조)

고 발 사 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감사결과 일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U는 2010. 9. 7.부터 2017. 1. 8.까지 구례군 읍과 산림T/F팀장으로 구름다리 설치사업을 총괄하였다.

1. U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나-7)에 따르면 설계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14년 1월경(날짜 모름) T이 구름다리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 후 설 명절을 앞두고 T으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받았고 2014년 2월 말경(날짜 모름) ○○의 케이블시스템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기로

결정하고 바로 T으로부터 구례군청 본관 3층 대회의실 창문 근처에서 현금 50만 원을 수수하여 차량 주유비,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등 ㉠㉠의 케이블시스템을 실시 설계에 반영한 대가로 9차례에 걸쳐 현금 170만 원과 물품 39만 원 상당, 계 209만 원 상당의 금품을 T으로부터 수수하였다.

이와 같이 U는 「형법」 제129조(뇌물수수)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직무대리 부당 지정을 통한 승진임용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강릉시

조 치 기 관 행정안전부

내 용

1. 업무 개요

강릉시장 AG은 2018. 7. 1.부터 2019. 1. 5. 현재까지 시장의 직위에서 관내 인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8. 7. 3. [표]와 같이 ■읍 읍장 AH을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등 총 6명⁴⁴⁾을 국장 직위의 직무대리로 지정하거나 승진임용하였다.

[표] 4급 직무대리 지정 및 승진임용 현황(2018. 7. 3. 기준)

연 번	성명	직렬	전 직위	발령 직위	승진소요 최저연수 충족일	인사위원회 심의 여부
1	AH	행정	■읍장	▲국장 직무대리	2018. 10. 1.	미심의 ³⁾
2	AI	행정	♠과장	▶국장 직무대리	2018. 10. 1.	미심의
3	AJ	행정	♣과장	▼국장	2017. 7. 1.	심의
4	AK	시설	♥과장	◀본부장 직무대리	2018. 12. 19.	심의 ⁴⁾
5	AL	보건	★과장	●소장 직무대리 ¹⁾	2018. 12. 19.	심의
6	AM	농촌지도	◎과장	◆센터 소장	— ²⁾	심의

주: 1.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소장은 의사 또는 보건 관련 직렬만 임용 가능하며 해당 직렬에 승진대상자가 없어 직무대리로 임용함

2. 농촌지도직은 농촌지도사와 농촌지도관 2개 계급으로 되어 있는데, AM은 이미 농촌지도관으로 근무하고 있어 ◆센

44) 2018. 7. 1. 기준 강릉시의 4급(국장급) 결원은 6명으로 직렬별로 행정직렬 3명, 시설직렬 1명, 보건직렬 1명, 농촌지도직렬 1명(직위승진)의 승진요인이 발생함

터 소장으로 직위 승진함

3. 행정직렬은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요건을 갖춘 후보자가 있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없는 AH과 AI의 직무대리 지정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할 경우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위 2명의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지난 2018. 10. 4.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날 4급 승진임용함
4. 시설직렬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심의에서 제외되고 AK만 심의 대상에 오른 데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논란이 발생하였고, AK의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지난 2018. 12. 24.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2. 26. 4급 승진임용함

자료: 강릉시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을 보충하고,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급 하위직급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8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5에 따르면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고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4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강릉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국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법정대리)하되,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급 순위에 따라 직무대리를 지정(지정대리)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준용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 따르면 지정대리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⁴⁵⁾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고, 직무대리자가 승진이 예정된 때⁴⁶⁾에 한하여 본래 업무를 떠나 직무대리만의 업무를 수행(전임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강릉시 직무대리 규칙」 및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등에 정한 바와 다르게 승진후보자 명부에 없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치지 않아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국장 전임 직무대리로 지정하여 승진자로 사실상 내정하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특정 후보자를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배제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에 논란을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위 사람은 강릉시장에 공식 취임⁴⁷⁾하기 전인 2018. 6. 20.경 강릉시 총무과로부터 2018. 7. 1. 기준 행정직렬 3명, 시설직렬 1명의 4급 승진요인이 발생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하여 승진자격을 갖춘 5급 직원은 행정직렬 3명 및 시설직렬(□직) 1명이라는 보고⁴⁸⁾를 받았다.

그리고 위 사람은 2018. 7. 1.과 7. 2. 두 차례에 걸쳐 ■과장 AN 등으로부터 승진 요건을 갖춘 직원이 있는데도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경우 인사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4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 [별표 4]에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따라 승진임용범위를 규정함

46)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 직무대리하고 있는 지위가 공식이고 직무대리자가 승진심사를 통과하여 승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함

47)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 6. 13.)에서 강릉시장에 당선된 후 2018. 7. 2.(월) 공식 취임함

48) 강릉시 총무과는 시장이 시정 인수인계로 바빠 직접 보고하지 못하고 인사요인 발생 보고서와 승진후보자 명단만 서류로 보고함

그런데도 위 사람은 국장으로 2년 이상 근무 가능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등⁴⁹⁾의 사유로 행정직렬 승진 3자리 중 2자리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를 승진시키지 않고 직무대리로 운영하도록 지시한 다음,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하는 등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AH과 AI⁵⁰⁾을 각각 ▲국장 및 ►국장 전임 직무대리로 지정하고 2018. 7. 3. 직무대리(지정·전임대리) 발령하였다. 그리고 AH과 AI의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충족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승진 심의·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승진자로 내정하였으며, 2018. 10. 1. 위 2명이 승진소요 최저연수 4년이 경과하자 같은 해 10. 5. 4급으로 승진임용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시설직렬 승진 1자리에 대해서는 2018. 7. 2. 취임 전 주변 평가를 듣고 시설직렬의 승진후보자명부상 유일한 후보자(□직 AO)를 승진시키지 않기로 한 후 결원인 시설직렬 국장 직위의 승진 대상을 시설직렬 중 토목직으로 한정⁵¹⁾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유일한 후보자는 2018. 7. 2. 개최된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못한 반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하는 등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직(AK⁵²⁾)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부장 직무대리로 지정되는 등 사실상 승진자로 내정되었다.

그 결과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사실상 승진자를 내정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권한

49) 행정직렬 승진대상자 중 BN는 2년 이상 근무가 가능하였으나 시장은 취임 전에 주변 평가를 듣고 승진 대상에서 제외함

50) 2018. 7. 1. 현재 AH과 AI는 5급 근무연수가 3년 9개월에 불과하여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승진소요 최저연수(4년)를 충족하지 못함

51)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제2조 제5항 [별표 5]에서 ◀본부장은 행정, 기술직군(토목·건축 직류 등)중에 임명하도록 정해져 있음

52) 2018. 7. 1. 현재 AK는 5급 근무연수가 3년 7개월에 불과하여 승진소요 최저연수(4년)를 충족하지 못함

을 침해하였다는 내용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시민단체 등이 이 건 관련하여 시장을 고발하는 등 인사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강릉시는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26568호) 제6조 제5항 제2호의 소속 장관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임으로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⁵³⁾을 준용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건 「강릉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법정대리자⁵⁴⁾가 있어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지정대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지방공무원 인사에 준용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와 「지방자치단체 직무대리규칙 표준안」에 지정대리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배수 범위 내에 있는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가 승진이 예정된 때에 한하여 본래 업무를 떠나 직무대리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승진후보자명부에 없는 AH 등 4명을 전임 직무대리로 지정하고 사실상 승진자로 내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강릉시는 국장 결원과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인원이 같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퇴직일, 업무능력 등을 감안하여 적임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으로 ▲국장 및 ►국장은 2018. 7. 3. 직무대리 발령한 후 같은 해 10. 5. 직무대리를

53) 「직무대리규정」상 위 규정에 따라 전임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도 고위공무원단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그 외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54) ▲국장은 ◆과장 BO, ►국장은 △과장 BP가 법정대리자임

해소하고자 인사위원회 승진 의결을 거쳤고, ◀본부장은 업무 수행에 있어 토목직류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8. 7. 2. 인사위원회에 심의요구하였으므로 인사위원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8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5 등에 따라 승진대상자의 적합 여부 판단은 인사위원회 권한인데도 시장이 취임 전 주변 평가를 듣고 특정인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무대리로 승진자를 사실상 내정한 점, 강릉시 인사위원회는 2018. 10. 4. AH과 AI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어 승진대상자로 적합할 것 같다는 사유로 위 2명을 승진자로 심의·의결하는 등 직무대리 지정이 인사위원회 심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시장은 주변 평가를 듣고 특정인을 승진에서 배제하였으며 AK가 ◀본부장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토목직류를 승진직렬로 배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하면서 특정인을 승진자로 사실상 내정하거나 승진후보자를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배제하는 등 규정에 위배되게 인사업무를 처리하여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초래한 강릉시장 AG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통보(비위)

제 목 금품 수수

소 관 기 관 법무부

조 치 기 관 법무부

내 용

1. 업무 개요

법무부 ◎국 ●소⁵⁵⁾ ●부 ●과 과장 AP은 2016. 6. 2.부터 2019. 2. 27. 현재 까지⁵⁶⁾ 위 관서 위 직위에서 약품 관리 등 ●소 내 약제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2. 관련 규정 및 판단 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금품 등을 받은

55) ●소(충남 공주시 소재)는 법무부 ◎국의 소속기관임

56) 2016. 6. 2.부터 2018. 4. 15.까지는 ●소 ●부 ●과장 직무대리로 해당 업무를 수행함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⁵⁷⁾ 서면으로 신고하는 한편, 제공자에게 그 금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AP은 의약품 통계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 부장 AQ의 요청으로 총 3차례⁵⁸⁾에 걸쳐 ○소의 분기별 의약품 구매 현황(구매일자, 약품명, 수량, 약품단가, 제약회사명)⁵⁹⁾ 자료를 제공한 후 AQ으로부터 2018년 1월경(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음)과 같은 해 4. 23. 및 7. 24.에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1장씩, 계 3장을 우편으로 제공받았다.

또한 AP은 AQ으로부터 받은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3장 중 1장은 2018. 7. 14.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의 이마트에서 물품 구입을 위해 사용⁶⁰⁾하였고 나머지 2장은 같은 해 10. 1. ○소 약제과 사무실에서 찢어 폐기하는 등 제공자인 AQ에게 해당 금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AQ으로부터 위 상품권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이 지난 같은 해 10. 23. 소속기관인 ○소에 신고하였다.⁶¹⁾

5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체 없이'란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58) AP은 AQ에게 2018. 1. 25.과 같은 해 4. 13. 및 7. 20.에 해당 정보를 메일로 송부하였으며, 이후 AQ은 AP에게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1장씩을 우편으로 발송함

59) 해당 항목은 ○소가 2013. 4. 19. 정보공개 청구(청구자: AR)를 받아 제공한 적이 있는 자료와 항목이 동일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아님

60) AP은 2018. 11. 6. ○소 ■과 AS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AQ으로부터 받은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3장을 전부 사용하지 않고 찢어버렸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번 감사 시 확인한 결과 같은 해 7. 14.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1장을 사용하여 스카치매직테이프(총 14,200원)를 구매하였고 거스름돈으로 상품권 85,000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 다만 위 상품권 85,000원에 대해 AP은 찢어버렸다고 진술함

61) 2018. 10. 1. 과 물품(쓰레기통) 구입 비용의 처리에 대해 AP은 AQ으로부터 받은 상품권으로 쓰자고 하였으나, 과 운영비로 써야 한다는 ○소 ○부 ○과 AT과의 의견 충돌이 있었고 이후 AP은 상품권 2장을 찢어 폐기하였음. 위 상품권과

이뿐만 아니라 AP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회사 ■■제약 ●지점 지점장인 AU⁶²⁾로부터 2018. 2. 12.⁶³⁾ 명절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냄비 2개(품목명: 테팔 듀에또 스테인리스 양수곰솔 22cm, 품목가액: 개당 117,000원)⁶⁴⁾를 제공받는 등 금품을 수수하고서도 해당 사실에 대해 ●소에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제공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AP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과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21조 및 제23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고, AU의 행위는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2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⁶⁵⁾

관계기관 등 의견

①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AP과 AU에 대해 징계 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관련자 주장** AP은 감사원 문답조사(2019. 2. 25.~2. 26.)에서 2018년 1월 등 3회에 걸쳐 AQ으로부터 상품권 3장을 받은 사실과 같은 해 2. 12. AU로부터 냄비

관련하여 과 내부에 잡음이 계속 있어 AP은 같은 해 10. 23. ●소에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였음

62) AU는 주식회사 ■■제약에서 납품하는 쿼테티아핀 XR 제제의 PTP(Press Through Package) 포장 개봉, 즉 제피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 ●과를 몇 차례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장인 AP을 알게 되었음

63) AU의 지시로 주식회사 ■■제약 ●지점 팀장 AV가 해당 물품을 ●소 ●과에 가져다 주었음

64) AP은 AU로부터 받은 냄비 2개를 ●소 약제부 약제과 직원인 AW과 AX에게 주었음

65) AQ의 행위 역시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2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나 감사기간 현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임(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

2개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도, 초임 과장으로서 ○과와 직원들을 위해 공적으로 사용하고자 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답변하였으며 AQ과 AU 역시 AP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AP과 AU의 금품 수수 및 제공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제5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비위내용을 통보하오니 법무부장관은 AP과 AU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23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통보(비위)]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서울대학교 교수의 겸직에 따른 보고의무 등 미이행

소 관 기 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조 치 기 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 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라 한다)는 소속 교수가 민간업체의 사외이사 등 겸직을 신청하는 경우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교원의 자격 및 허가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을 허가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

위 지침 제7조에 따르면 사외이사 등의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은 해당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적 지원의 총액⁶⁶⁾의 일정부분(연 2천만 원 초과 금액의 15%)을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하고,⁶⁷⁾ 제공받은 일체의 금전적 지원 내역과 발전기금 출연사항에 대하여 매년 소속 학(원)장⁶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대는 소속 교수가 금전적 지원 내역을 보고하고 발전기금을 출연하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66)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전 금액의 합

67) 2015. 12. 1. 지침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사항으로 2016년부터 시행됨

68) 2018. 9. 10. 소속 학(원)장에게 보고하던 것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침이 개정됨

검직허가에 관한 지침」⁶⁹⁾에 따라 검직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대는 검직허가를 받은 교수에게 금전적 지원 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안내할 뿐 그 이행 여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8. 10. 10.~10. 30.) 중 검직허가를 받아 사외이사 등을 겸직한 교수 대상으로 2016년과 2017년의 금전적 지원 내역 보고 및 발전기금 출연 여부를 확인⁷⁰⁾한 결과, [별표] “금전적 지원 내역 미보고 및 출연금 미납 현황(2016~2017년)”과 같이 2018. 10. 24. 현재 의과대학 ●교수 AY 등 12명이 겸직한 업체로부터 계 13억 4,102만여 원의 금전적 지원을 받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서울대 발전기금에 납부하지 않은 출연금은 계 1억 1,071만여 원이었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 소속 ●교수⁷¹⁾ AY는 2013. 6. 10. 주식회사 □□의 이사로 겸직 허가받아 겸직하면서 주식회사 □□으로부터 2016년 3억 2,851만여 원, 2017년 6억 881만여 원⁷²⁾의 금전적 지원⁷³⁾을 받았는데, AY는 의과대학 교무행정

69) 사외이사 등의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이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해당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적 지원 내역 및 발전기금 출연사항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외이사 등의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70) 금전적 지원 내역 등의 보고 대상은 2016년의 경우 250건(인원수 206명), 2017년의 경우 275건(인원수 231명)임

71)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2조와 「서울대학교 기금교원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기금교원으로서 외부기관 등의 기탁금, 부담금 또는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총장이 교원으로 임명함

72) 2018. 5. 3. 감사원이 출연금 납부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자 AY는 같은 해 6. 4. 의과대학 교무행정실에 2017년 금전적 지원 내역을 보고하고 6억 881만여 원에 해당하는 발전기금 8,850만 원을 납부함

73)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전 금액 기준

실로부터 2017. 1. 12.과 2017. 5. 12. 2016년의 금전적 지원 내역 등⁷⁴⁾을, 2018. 2. 9. 2017년의 금전적 지원 내역 등을 각각 보고하도록 안내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겸직허가를 받은 교수가 금전적 지원 내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도 서울대는 그 이행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겸직 교원의 복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대는 금전적 지원 내역 보고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겸직허가를 취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앞으로 규정을 준수하여 겸직교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은

- ①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 제7조를 위반하여 금전적 지원 내역 보고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같은 지침 제8조에 따라 겸직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② 겸직교원이 금전적 지원 내역을 보고하고 발전기금을 출연하는지 등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74) 2018. 10. 24. 감사원이 출연금 납부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자 AY는 같은 날 의과대학 교무행정실에 2016년 금전적 지원 내역과 발전기금 출연 대상액이 4,627만 원임을 보고함

[별표]

금전적 지원 내역 미보고 및 출연금 미납 현황(2016~2017년)

(단위: 원)

연번	겸직 연도	소속	직급	성명	겸직기관명	금전지원 총액	출연대상 금액	보고여부	출연금 납부 여부	출연금 미납 금액
계		12명			12개	1,341,029,317	159,154,397	보고 6건 미보고 9건		110,714,397
1	2016년	■대학	기금 부교수	AY	(주)□□	328,513,800	46,277,070	미보고	미납	46,277,070
2		□대학원	교수	AZ	(주)▲▲	99,999,996	11,999,999	보고	일부 납부	999,999
3		□대학원	교수	BA	▲▲	60,450,000	9,067,500	보고	일부 납부	1,827,500
4		■대학	교수	BB	(주)□□	193,225,806	25,983,871	보고	일부 납부	10,983,871
5		■대학	교수	BC	●●	46,666,666	4,000,000	미보고	일부 납부	400,000
6		□대학원	교수	BD	(주)●●	54,200,000	5,130,000	미보고	일부 납부	130,000
7		□대학원	교수	BD	(주)◐◐	48,000,000	4,200,000	미보고	미납	4,200,000
8		공과대학	교수	BE	◐◐	56,337,947	5,450,692	미보고	미납	5,450,692
9	2017년	■대학	교수	BC	●●	46,666,666	4,000,000	보고	일부 납부	1,000,000
10		■대학	교수	BF	▲▲	37,228,440	2,584,266	보고	미납	2,584,266
11		□대학원	교수	AZ	▲▲	99,999,996	11,999,999	보고	일부 납부	8,399,999
12		▲대학	교수	BG	▲▲	66,000,000	6,900,000	미보고	미납	6,900,000
13		■대학	교수	BH	▼▼	24,000,000	600,000	미보고	미납	600,000
14		■대학	교수	BI	▼▼	120,000,000	15,000,000	미보고	미납	15,000,000
15		▲대학	교수	BJ	☞☞	59,740,000	5,961,000	미보고	미납	5,961,000

주: 1. 2018. 10. 24. 현재 기준,

2. 2018. 12. 28. 현재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출연금을 미납한 겸직교원 12명 중 11명은 미납액 106,374,397원의 납부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명은 미납액 4,340,000원을 5회(2018년 12월 ~ 2019년 4월)에 걸쳐 분할 납부하겠다고 2018. 12. 26. 약정하여 미납에 대한 시정이 완료됨

3. ■대학 ●교수 AY는 2018. 12. 1. 의원면직, □대학원 교수 BD는 2017. 8. 31. 정년퇴직, ■대학 교수 BE는 2016. 8. 31. 정년퇴직, ▲대학 교수 BG은 2018. 8. 31. 명예퇴직을 함

자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